

## 사회통합은 경제자유화를 통해서

민경국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사회통합이 화두다. 이는 빈곤층 확대, 실업, 분배의 불평등 등으로 사회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는 진단에서 나온 것이다. 시장경제는 그런 갈등의 원인이기에 국가개입을 통해서 갈등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 시장은 사회통합 능력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사회통합의 조건을 염두에 둔다면 자유시장이야말로 사회통합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우선 주목할 것은 사회통합의 조건이다. 첫째로 사회구성원들이 재산과 소득을 획득할 기회가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들의 통합이 가능하다. 일부 계층만이 그런 기회를 누린다면, 이는 갈등을 부른다. 둘째로 일자리와 소득의 안정이야말로 사회통합의 핵심 조건이라는 것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고 믿음을 가질 때 사회통합이 가능하다. 사회의 기본적인 도덕규칙과 법 규칙을 준수할 때 그런 신뢰가 형성된다. 불신은 갈등의 원인이요 사회적 해체의 요인이다. 마지막 넷째로 사회통합을 해치는 것은 차별적 입법, 전관예우, 유전무죄의 표현처럼 법집행의 불공정이다. 정의의 공정한 관리야말로 사회통합의 중요한 요소이다.

흥미롭게도 자유 시장에는 그런 사회통합 조건을 충족하는 강력한 힘이 작동한다. 그 힘의 원천은 경제성장, 소득과 일자리 안정, 시장윤리의 준수, 법치주의이다. 성장하는 경제에서만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삶의 개선을 위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또 번영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침체된 경제는 사람들이 절망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꿈을 가질 수 없다. 삶의 향상에 대한 기대의 좌절은 갈등의 씨앗이다.

성장하는 경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상류층은 물론이요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한다. 그런 경제만이 모든 사람들을 포용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성장하는 경제는 자유시장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규제가 적을수록 세금이 낮을수록 다시 말하면, 경제자유가 많을수록 경제성장이 높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입증된 명제다. 경제자유는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새로운 지식과 기

회의 창출 등, 기업가 정신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가 많을수록 일자리도 늘고 소득도 증대하기에 성장하는 경제만이 일자리와 소득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

성장하는 경제만이 관용, 공정성에 대한 헌신,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촉진시켜 준다. 정직성, 약속이행, 소유권 존중 등, 도덕규칙을 준수하려는 동기가 자생적으로 형성된다. 그래서 신뢰사회가 가능하다. 사회적 이동성을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처지에 대한 위협으로도 여기지 않는다. 나 보다 잘사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도 없다. 경제발전이 도덕의 심화를 부르고 이것은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자유시장의 기초가 법치라는 것도 주지해야한다. 법치란 특혜나 차별적 입법을 막아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과 법집행을 말한다. 법치만이 공정사회와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간섭주의 정책은 마치 사회통합을 개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에 피해를 주어 성장을 멈추게 하고 돈 벌 기회도 줄이기에 소득불안, 일자리 불안을 야기한다. 그래서 간섭주의는 포용과 신뢰와 안정도 확립할 수 없다. 간섭주의는 차별과 특혜의 성격이다. 그런 정책으로는 공정사회도 달성할 수 없다.

자유 시장에는 강력한 사회통합력이 있기에 사회통합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또 개입한 들 그것을 개선하기는 고사하고 더욱 더 악화시킨다. 오늘날 사회갈등의 대부분은 정책의 잘못이라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역할은 자유와 재산권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이를 위한 공정한 입법과 재판이 필요하다. 정부는 기존의 다양한 규제를 풀어 경제자유를 확대해야 한다. 경제자유화가 통합의 길이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계층은 선별적 복지로 사회통합이 가능하다. 전관예우나 무전유죄, 검찰기소권의 정치화, 여론이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재판 등, 사법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이 점차 줄어들어든다는 보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들은 사회통합의 적이다.